

지방공기업 부채비율 50%대로 하락

57.9%로 전년대비 7.3%포인트 떨어져... 총 부채 68조1000억원 전년대비 4조1000억원 줄어

지난해 지방공기업 부채비율이 11년만에 50%대로 낮아졌고 부채규모도 70조원을 밑돌았다. 행정자치부는 4일 전국 413개 지방공기업 2016년 실적 경영평가결과를 발표했다.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66곳, 공사 63곳, 지방공단 84곳이다. 결과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총 부채가 68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4조1000억원이 줄어들어 4년 연속 감소했다. 부채비율은 57.9%로 전년대비 7.3%포인트 떨어졌고, 2005년 이후 11년 만에 50%대로 낮아졌다. 2014년부터 지정 관리해 온 부채 1000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 공사 26곳의 부채비율은 116.6%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136.9%) 대비 20.3%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올해 부채감축 목표(부채비율 120%)를 조기 달성했다. 전체 지방공기업의 당기순손실은 2585억원(전년대비 6500억원 감소)으로 집계됐다. 하수도 1조2352억원, 도시철도 8420억원의 적자가 주요인이었다. 도시개발공사의 총 부채는 36조7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조5000억원 줄었다. 금융부채는 18조4000억원(비금융부채 18조3000억원)으로, 금융부채 감소(3조4000억원)가 부채 감소의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또 도시개발공사는 2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지난해 흑자규모는 1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5508억 원(72.6%) 늘었다. 분양호조와 부채감축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등에 따른 것이다. 도시철도공사 부채규모는 전년 수준인 5조9000억원으로, 경영손실은 8420억원이 발생했다. 매출액은 전년 보다 1316억원 증가했으나, 낮은 운송요금, 무임승차손실 등의 구조적 요인으로 지속적인 경영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수도 총 부채는 7996억원으로 금융부채 차입금 상환 등으로 전년 대비 795억원 감소했다. 하수도 부채는 6조3000억원으로

하수시설 신설·확대 등으로 부채가 소폭 증가(전년대비 2093억원)였다. 하수도는 하수관거 정비 등을 위한 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증가에 따라 경영손실이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김현기 행정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2005년 이후 11년 만에 50%대로 낮아지고, 부채중점관리기관의 부채감축목표도 조기에 초과 달성하는 등 재무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은 그동안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강도 높은 노력이 거둔 결실이며,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자랑했다. /뉴스

검찰총장 후보자에 문무일 부산고검장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4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문무일(56·사진) 부산고검장을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문 고검장을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문 고검장은 호남 인사로 광주주고교와 고려대를 졸업했다. 사법고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로 대검 중수과장, 인천·부산지검 1차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서울 서부지검장, 대전지검장 등 검찰 내 주요요직을 두루 거쳤다. 조직 장악력을 바탕으로 한 추진력과 리더십을 갖추고 있어 검찰 개혁 과제를 완수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2015년 '성인중 리스트' 특별수사팀 팀장을 역임하면서 흉준표 당시 경남도지사와 이원구 전 국무총리를 기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신정아 사건', 김경준 전 BDK 대표 기획입국,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등 굵직한 사건 다수를 수사한 바 있다. 법무부는 이금로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 체제에서 검찰총장 후보 임명제정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전날 소방청 농협대 석좌교수, 문무일 부산고검장, 오세인 광주고검장, 조희진 의정부지검장을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 차관이 문 대통령에게 4명의 후보를 임명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문 고검장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장관급인 검찰총장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으로 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예정이다. /뉴스



신임 장관들과 환담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장관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김상곤(왼쪽 두번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은경(왼쪽) 환경부장관과 환담하고 있다.

김중희, 농업예산 대폭 증액 촉구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제부안 김종희 의원은 4일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변화에 기초한 농업예산의 대폭적인 증액필요성을 역설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농업은 직접 챙기겠다"고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밝힌 내년 농업예산은 "올해보다 1.6% 줄어든 19조 3000억 원으로 기획재정부 관료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의 단편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내년 국가예산 증가액은 6%이나 최근 5년간 농축식품부 정부안 예산 평균증가율이 1%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민 하위 20%의 소득은 최저생계비에도 미달한다"면서, "농민도 노동자로서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고 보장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농업예산의 증액만큼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유영민 미래부장관 후보자 "통신비 경감 기필코 한다"

"통신요금 인가제 권한 '심의위원회' 구성은 사회적 논의 기구가 만들어질 때 논의할 것"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시간을 두고 통신비 경감 목표를 기필코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자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신비 인하는 법 테두리 안에서 기업과 서로 협조해서 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단기와 중장기적 대책을 발표를 했다"며 "중장기적인 대책은 근본적으로 시간을 갖고 (통신비) 줄여야 한다는 원칙하에 기업과 시장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최근 선택약정 할인을 25% 상향, 사회취약계층 1만1000원 기본료 감면, 분리공시제 도입, 보편 요금제 도입 등 가

계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절감 공약 중 기본료 폐지가 제외되면서 공약 후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시민단체와 통신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관련 협의의 이어나가는 방침이다. 여기에 통신요금 인가제 등의 권한을 가진 심의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 후보자는 "검토하겠다"며 "사회적 논의 기구가 만들어질 때 다시는 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자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는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해

야 하는 점이 명시돼 있다. 기업들이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줘야 할 부분이 있다"며 "다만, (정부가) 법을 초월해서 (기업에게) 강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현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정부의 추진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 유 후보자는 "소송이 진행되면 1년 동안 이어질 수 있 수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이 초연결시대의 고품질 통신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뉴스

김관영 의원, '영세·중소 수출기업 권익 보호 하도급법 개정 정책토론회' 개최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3일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영세·중소 수출기업의 권익보호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6월 김 의원이 구매확인서 발급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영세·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 실적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현행 제도상 내용신용장은 의무화돼 있고 구매확인서 발급은 법적 의무가 없다. 이에 따라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아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특히,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영화·드라마·음악·게임 등 콘텐츠 업계는 73.6%가 구매확인서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 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콘텐츠 산업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 거래가 이루어져 상품무역과는 수출 과정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국내 약 10만 곳의 콘텐츠 관련 기업 중 열에 아홉이 영세 기업인 것을 감안할 때 관련 법규의 미비로 소규모 기업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김관영 의원은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미래 먹거리인 콘텐츠 관련 기업이 수출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속출해 왔다"며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을 통해 영세·중소기업의 권익보호와 함께 수출 장려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의 좌장은 권영욱 부산외대 교수가 맡았으며 김정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태인 강원대학교 국제무역학전공 교수, 최태광 KINET 실장이 발제를 했다. 이밖에도 송정원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신종훈 현대자동차 부장, 이현국 삼속 대표, 최진영 테스크 부장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석해 열린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진성 기자

국립전주박물관,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옥마을, 전주 한식거리, 전주 한옥마을, 전주 한식거리, 전주 한옥마을, 전주 한식거리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